

천정배·정동영·문병호...국민의당 당권경쟁

막 오른 전당대회 분위기 고조...최경환 등 8명 거론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변수...安心 향배도 관심

국민의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점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단 당권 주자로는 천정배, 정동영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장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지난주 출마 결심을 굳히고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행보를 넓히고 있다.

창당 당시 공동대표를 맡았던 천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체면을 구겼다는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의 당권 도전은 그의 대선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당권을 쥐고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대선 재도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병호 최고위원도 당권 도전 결심을 굳혔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그는 수도권(인천 부평)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지만 지지 기반이 확실치 않다는 점이 약점이다.

이 밖에 광주의 최경환 의원과 전남의 황주홍 의원, 경기의 이언주 의원 등이 전대 출마를 고심하고 있으며 정호준 전 의원과 박주원 경기도당 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일단 최대 변수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 여부다. 1등이 대표를 하고 차순위 순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면 주자들

이 많이 나설 수 있으나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할 경우, 오히려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기탁금도 문제다. 이번 전당대회에 5명이 지도부에 도전할 경우, 1인당 기탁금이 3억 원 가까이 될 전망이다.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을 굳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천정배·정동영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 민심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의 '잠입주'인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도 관심사다. 당내에 여전히 영향력을 가진 만큼 '안심'(安心)의 향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 대표 선거 방식과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강원도 고성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한 워크숍을 거치며 본격적인 전대 준비 과정에 착수했고, 일단 전대 날짜는 8월 27일, 장소는 서울 장충체육관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새 지도부 선출 형식을 정기 전대로 할지, 임시전대로 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임시전대를 하게 되면 신임 당 대표 임기는 2019년 1월까지로, 대선 패배로 사퇴한 박지원 전 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정기 전대를 치러 2년 임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의당은 당헌·당규상 집단지도체제 규정을 단일지도체제로 바꿔 내년 지방선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정부 첫 추경 역대 최장 지연

19일째 계류...역대 정권 첫 추경 일주일도 안걸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역대 최장 지연 처리(상임위 회부~상정일 기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경안은 이달 7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상임위도 같은 날 회부했다. 하지만 추경안은 현재 상임위 상정 일자조차 잡지 못한 채 16일째 계류 중이다. 아권이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증원 등 세부 항목이 미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정권의 첫 추경이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던 것과 대비된다.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은 상임위에 2008년 8월 27일 회부됐고 그로부터 닷새 뒤인 9월 1일을 시작으로 같은 달 8일까지 각 상임위에 상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첫 추경(경기대책)은 2013년 4월 18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각 상임위는 바로 다음 날인 19일부터 30일까지 추경안을 상정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첫 추경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까지 하루 이틀 만에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추경 최장기 기록에 전횡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어 점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

오늘부터 청문회 시즌3...전운 감도는 여야

오늘 한승희 국제청장

28일 농림 김영록·국방 송영무

29일 교육 김상곤·통일 조대엽

野 "3인은 자진사퇴" 파상공세

이번 주 문재인 정부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검증대에 오르는 '인사청문회 시즌 3'가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선 26일에는 한승희 국제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28일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29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3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4일로 잡혀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30일에 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3일이나 4일로 일정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아권은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들 후보자를 '부적격 신(新) 3총 세트로 규정하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 논란이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과거 한신대 교수 시절 주한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 3명의 후보에게 '부적격 3총 세트', '국민기만 3총 세트'라고 각각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 3명의 후보에게 '부적격 3총 세트', '국민기만 3총 세트'라고 각각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 3명의 후보에게 '부적격 3총 세트', '국민기만 3총 세트'라고 각각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대엽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음주 운전 논란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지명 당일인 지난 11일 조 후보자의 음주 운전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의혹과 함께 조 후보자가 사외 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에서 직원 임금이 체불됐는데 당시 조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 청국의 하이라이트는 송

영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남품비리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 후 범무법원에서 월 3천만 원의 조고액 자문료를 받았고, 4차례 위장전입을 했으며, 1차 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이들 3명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특히 그동안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지지한 정의당까지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본인 해명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연일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어 적지 않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추미애 2기 체제 출범

서울·제주 등 3곳 권역별 최고위원 교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권역별 최고위원 일부가 임기 만료로 바뀌면서 '추미애 대표 2기 체제'가 새롭게 출범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8·27 전당대회에서 시도당 위원장이 호선으로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아홉 자리 가운데 다섯 곳을 시도당 위원장이 권역별로 나눠 맡고 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에 바뀌는 곳은 ▲서울·제주 ▲경기·인천 ▲영남 등 3곳이며 강원·충청과 호남 등 2곳은 변경이 없다. 권역별 최고위원을 교체하는 곳은 시도당 위원장들이 2년의 권역별 최고위원 임기를 나눠 맡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서울·제주는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에서 김우남 제주도당위원

장으로 바뀐다. 경기·인천 권역 최고위원은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에서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으로 넘어간다. 또 영남권 최고위원은 임대운 대구시당위원장에 이어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이 맡게 된다. 3명의 신임 최고위원 중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은 28일부터,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과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은 7월 초에 최고위원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에 합류하는 최고위원들도 전임과 마찬가지로 친문(親文·친문재인) 성향의 인사들로 분류된다.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의 경우 '순화규계'로 분류됐으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은 친문 핵심인사로 꼽힌다.

/박지경기자jzpark@kwangju.co.kr

'신안 삼도대교 완공' 다리 놓은 박지원

오늘 준공식...경북 최경환 의원과 150억 예산 지원 합작

신안 삼도대교가 26일 개통되는데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목포시)의 물 밑 노력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도대교는 신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표류하다가 2010년 박준영 전 전남지사(현 국민의당 국회의원)가 도비를 투입해 착공하게 됐다.

하지만 전남도의 재정 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 동서화합포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경북의 최경환

의원에게 "경제 부총리가 되면 삼도대교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경제 부총리로 임명된 최경환 의원은 지역개발특별회계 150억 원을 즉각적으로 투입, 삼도대교 개통에 큰 힘이 됐다.

박 의원과 최 의원은 왕복 2차선으로 '죽음의 고속도로'로 불렸던 88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장하는 사업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 2014년, 2015년 2년 동안 총 1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마무리 짓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 1인 2,000만원 이상
-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